

# ‘핵 불능화’ 시간표 집중 조율

## ■6자회담 이틀째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자 회담 참가국들은 19일 오전 베이징(北京) 다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회담을 속개, 2시간여 동안 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신고,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경제·에너지 지원 등 2·13합의 2단계 조치 이행방안을 협의했다.

6개국은 업무오찬을 마친 뒤 다시 수석대표회담을 열 계획이었으나 일부 현안에 대한 토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양자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북한이 전날 핵시설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를 연내에 이행할 의지는 물론 핵무기까지 신고대상에 포함시킬 용의를 시사하면서 불능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 불능화 촉진 위해 北에 ‘중유 상품권’ 제안도 의장성명 초안 회람... 회기 하루 연장키로

단계별 조치를 놓고 집중적인 토론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석대표들은 전날에 이어 북핵시설 불능화와 핵프로그램 전면 신고의 목표 시간대를 협의하고 불능화 종료시점까지 북한이 받게 될 중유 95만 상당의 대북 상응조치 제공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석대표들은 특히 불능화 시간표를 집중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의장성명 문안에 대해 본국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회기가 하루 연장됐다.

한 상응조치로 이른바 ‘중유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안을 북한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북한의 수용 여부가 주목된다.

의장국 중국은 현안 토론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의장성명 초안을 회람시켜 최종적으로 참가국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빠르면 이날 저녁 의장성명 최종문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은 의장성명 문안에 대해 본국의 훈련을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해 회기가 하루 연장됐다.

천 본부장은 이날 이틀째 일정을 마친 뒤 가진 브리핑에서 “회기는 내일 오전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의장성명 초안에는 ▲2·13 합의의 초기단계 조치와 다음 단계 이행 ▲6자 외교장관 회의 일정 ▲5개 실무그룹(WG)회의 개최일정 등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불능화와 신고, 이에 상응하는 에너지·경제지원에 대한 목표치 등을 명기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외교장관회담도 ‘가능한 빠른 시일내’ 개최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좁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8월중 비핵화 실무그룹회의 등을 개최해 진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이징=연합뉴스



## ‘위안부 결의안’ 30일 표결

美 하원 혼다의원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를 촉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이 30일 미국 하원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쳐질 것 같다고 이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클 혼다(민주당) 의원이 18일 밝혔다.

혼다 의원은 위안부 결의안이 다음달 6일 의회의 여름 휴회가 시작되기 전 확실히 상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30일은 일본 참의원 선거 다음날이다. 이 결의안은 지난 달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는 가토 료조 주미 일본 대사가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 등 하원 지도자 5명에게 지난달 서한을 보내 결의안 통과시 양국의 우호관계가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워싱턴포스트=연합뉴스

## ‘9·11’ 연상시킴...테러와는 무관

18일 저녁(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 중심가에서 지하에 매설된 증기파이프가 폭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소방관들이 폭발 후 증기와 부스러기들이 분출하는 현장에 정착한 한 학교버스를 조사하고 있다. 뉴욕 경찰은 이 폭발이 테러로 인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 “골판지 만드는 조작”

中 또다시 충격속으로

중국 베이징의 한 만두가게에서 폐종이박스를 몰래 불려 만두소를 만들어 팔았다는 보도는 조작된 것으로 밝혀져 또 한번 충격이 던져지고 있다.

베이징에서 발행되는 경화시보 19일 보도에 따르면 골판지 만두사건은 지난 8월 이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베이징TV의 고발프로그램인 ‘터우밍두’의 임시직 직원 쑤모씨가 연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이징TV는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하고 18일 시청자에게 사과했다. 쑤씨의 연출은 중국 공안당국이 용의자 4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선양=연합뉴스

## 영국, 대홍수 때문에 섬 됐다

영국은 원래 유럽 대륙에 붙어있던 반도였으나 수십만년 전 빙하기에 일어난 대홍수로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깊은 물길이 패여 섬나라가 된 것이라고 영국 학자들이 밝혔다.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은 고해상도 음파 탐지기를 이용 영국 해협의 바닥을 조사한 결과 석회암 암반에 최소한 45km 폭에 깊이 수십m의 물길이 패인 것을

발견했으며 이는 약 45만~20만년 전 조만 100만m의 물을 쏟아부은 대홍수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미시시피강의 유속보다 100배나 위력 큰 이 홍수가 지나간 뒤엔 빙하가 녹아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현재의 영국 해협이 생겨 영국 땅이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라고 학자들은 지적했다. /런던AP·로이터=연합뉴스

## 기존 핵 폐기-대규모 지원 ‘빅딜’ 있었나

### ■北 보유 핵무기 신고 대상 포함 배경은

북한이 2·13합의 이행의 2단계 조치에 해당하는 ‘핵프로그램 신고’ 대상에 보유중인 핵무기도 포함시킬 용의를 표명한 것으로 관측과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전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8일 6자회담 첫날 수석대표회담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신고대상에 핵무기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핵무기가 있다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참가국 모두)다 해석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핵무기든 핵폭발장치든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게 있으면 다 집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도 “북한이 보유중인 핵무기도 핵프로그램 신고 목록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 계속 논의할 것”이라며 “지금은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부정하지는 않은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보유한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시설(핵프로그램)을 구분한다는 논리를 펴면서 ‘핵 프로그램 신고대상’에 핵무기를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2·13 합의는 핵프로그램 신고와 관련, ‘모든 핵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한 신고’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신고에 연결되는 초기단계 조치로서 ‘9·19 공동성명에 따라 포기하도록 되어 있는, 사후 연료봉으로 부터 추출된 플루토늄을 포함한 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프로그램의 목록을 여타 참가국들과 협의한다’고 돼 있다.



북핵 6자회담 남북 수석대표인 전영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김계관 외무부 부상이 18일 중국 베이징 다오위타이에서 양자 회담을 갖기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2·13 합의 어디에도 북한의 핵무기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말이 명시돼 있지는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한동안 북한의 ‘보유 핵무기’를 추후 해결과제로 미루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으며 이에 정부 당국자들은 2·13합의와 9·19공동성명에 명기된 ‘모든 핵 프로그램’에 핵무기도 포함돼 있다는 논리로 대응했다. /세이징=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2·13 합의가 이행단계로 접어든 상황에서 남북관계에서도 병행해 논의해야 할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관급 회담을) 일찍 개최하자고 제의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장관급회담이 8월 초로 앞당겨 개최되면 8·15경축일을 앞두고 있다는 시가지 상징성에 더해 북핵 문제 진전과도 맞물려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남북간 논의가 본격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합뉴스

## “장관급회담서 평화체제 논의 가능”

통일부 밝혀

인했다.

한반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하기 위한 관계국 간 논의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북측에 제22차 남북 장관급 회담을 조기에 열자고 제안한 것으로 확

통일부 김남식 대변인은 19일 “이달 초 북측에 진통문을 보내 차기 장관급 회담을 8월 초에 개최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관급 회담은 당초 9월 초 열릴 것으로 예상돼 왔다. /연합뉴스